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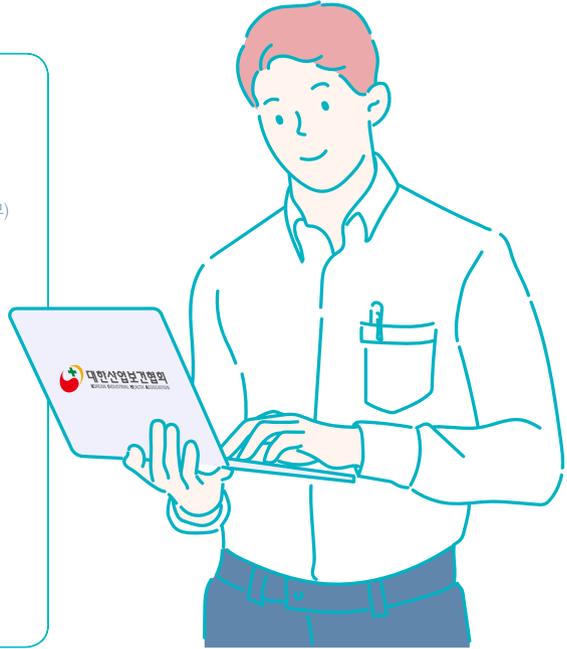
제정과정에서의 법적 쟁점과 남겨진 과제

『중대재해처벌법』

12월

들어가며

- 1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취지에 대한 기본적 관점
- 2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1. 정의,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 3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3. 도급과 위탁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
4. 경영책임자의 처벌, 5. 법인 등의 처벌)
- 4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6. 인과관계의 추정, 7. 손해배상의 책임,
8. 벌칙의 하한형 설정)
- 5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1. 경영책임자 개념의 불명확 및 불합리)
- 6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2.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
- 7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3. 평등의 원칙 또는 죄형균형의 원칙 위반)
- 8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4. 불명확개념의 다수 사용으로 인한 혼란)
- 9월 맺으며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공포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만 하더라도 5개나 되고 국민입법청원안까지 제출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각 당의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차가 있는 등 제정과정에서부터 많은 진통과 혼란이 있었다.

내용적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발의안들은 경영계뿐만 아니라 법무부, 법원행정처, 전문가 등으로부터 위헌성 등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혼란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짧은 시간 속에 심의를 하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 발의안들을 반대한 경영계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한 노동·시민단체로부터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본고는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초가 된 5개 의원안이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내용으로 최종 합의되었는지를 주요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회고적으로 고찰하고, 제정된 법률에 남겨진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입법취지에 대한 기본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발의된 법안들에 어떤 법리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앞으로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법령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할 때는 논점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발의된 5개 의원안 중 강은미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탄희 의원안과 박범계 의원안은 한두 개 조항 외에는 박주민 의원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조항에 한정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임이자 의원안은 여당 의원안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의 안으로서 외양적으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강은미 의원안 및 박주민 의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고찰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부분의 경우는, 본법에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본법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면서 학문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큰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구하고자 한다.¹⁾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남겨진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취지에 대한 기본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호에 계속〉

1)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문제점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는 다음 기호로 미루고자 한다.